

농번기 앞둔 전남 지자체, 농촌 일손 구하기 전쟁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시 본격 입국 2274명 배정에 1500명 고용 예상 인력 이탈 많아 방치 대책 고심 나주·고흥 공공형계절근로 첫 시행 새로운 인력 공급 모델될지 관심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전남 지자체들이 농촌 들녘 일손 구하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국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렵게 확보한 인력이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가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탈 방지도도 전전공공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무부에서 22개 전남 지자체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274명이다. 배정된 모든 인원이 입국하지는 못하지만 최소 1500여명의 입국이 예상된다. 이것이 전남도의 실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과 6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법무부가 2월과 7월에 해당 지역에 인원을 배정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광주·전남 산업현장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젊은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지역의 농·산·어촌 현장은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웠고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역할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남의 농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남의 농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정이 어쩔지 전남의 각 지자체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거나,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국 지자체들은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이 확보됐다는 점 등을 꾸준히 알려 해외 지자체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20일 나주시 산포면에서 부추 농사를 짓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고흥군은 필리핀 2개 지방정부와 MOU를 맺어 올해 225명의 인력을 배정받았다. 고흥군은 최근 3년간 농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이 5%미만을 기록해 법무부가 고용주 1명당 최대 9명이었던 고용가능 인원을 11명까지 늘리는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외 지자체 입장에서 한국으로 인력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인권', '주거', '급여'다"며 "고흥군은 수시로 현장 점검을 나가 주거 상태를 살피고, 월급이 통장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등을 살폈다"고 말했다.

이탈률이 높으면 해외 지자체에서 여론이 좋지 않아 MOU를 맺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법무부로부터도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지자체들은 흑시나 모를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는 담양 2명, 보성 5명, 무안 6명, 해남 40명이다. 해남은 146명을 고용해 그중 30% 이상이 이탈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당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이 더 많은 임금을 준다는 곳으로 단체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조사 결과 해남군 차원에서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와 고흥 등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도 시행돼 새로운 모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 등을 제공하며 관리하고,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민에게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남에서는 올해 나주, 고흥, 영암, 무안, 해남 등 5개 지자체가 결합해 최종적으로 주거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나주배원에농협(50명)과 고흥풍양농협(20명)이 선정됐다.

나주시는 고구려대 기숙사를 임대했고, 고흥군은 3층짜리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식 공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인원이 적은 만큼 전체 농가가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파종이나 이작을 하는 경우 수십명에서 백 여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반해 계절근로자로 배정 받는 것은 농가당 최대 십여명 밖에 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력이 적기에 투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농업 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이 장기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인 줄 알면서도 '편리하게' (짧은 기간·필요할 때) 일손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쓸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나주의 한 농민은 "50명이면 나주 전체의 배 농가에서 활용할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으로 시행했던 무주에서 인원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발견됐다"며 "올해 처음 시행해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불법건축물 시정 왜 안해' 담양 주민감사 청구 관심

담양 주민들이 전남도에 한솔페이퍼텍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담양군수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군 대정면 주민 800명을 청구인으로 하는 청구인명부가 포함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됐다.

감사 청구는 '담양군수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무'와 관련한 것으로, 담양군이 대정면 한솔페이퍼텍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이후 업체측이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과 공작물 77건이 적발됐지만, 담양군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법이 아니라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만 18세 이상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남도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서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전남도는 22일 주민감사접수를 공표하고 감사심의위원회 회를 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모든 학교급식 종사자 시교육청, 폐암 검진 확대

광주시교육청은 20일 전체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제13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실시(안)'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경력 5년 이상 급식종사자 1326명 대상 폐암 검진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을 전체 급식종사자로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리 흙(유독주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급식실 내 후드 성능평가도 마쳤다.

시교육청은 올해 60개교에 1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스식 조리기구로 전기식으로 교체하고, 이후 예산 300억원을 추가 확보해 5년 내 공사·사립 전체 학교 환기설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영제 기자 yjyou@kwangju.co.kr

식당서 소란 피우는 아들 나무랐는데 아동학대?

광주서 손님과 시비 끝 국회의원 비서관 신고 당해 '논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녀를 나무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던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일 아이 생일을 맞아 가족(아내·5살·6살 아이 두명)과 함께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식사 도중 자녀들이 너무 떠들자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에 구석진 좌석으로 이

동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 둘이 식당에서 계속 장난치고 유튜브를 보며 시끄럽게 하는 등 말을 너무 듣지 않아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식당에서 그러면 안돼 빨리 핸드폰 꺼'라고 소리쳤다"면서 "이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휴대전화를 끄지 않자 소매를 잡고 그만하라고 만류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계속 떠들자 급하게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가려던 중 술에 취한 손님 B씨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가게 앞에서 대기기사를 기다리던 A씨에게 B씨가 "너 이리와봐", "너 같은 새끼도 아베냐"고 가슴을 밀치며 손찌검을 하자 A씨는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B씨가 "내가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소한 다툼이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단순 훈육은 아직까지는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철 광주지방 변호사회 회장은 "폭언도 지나치면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부모가 자녀한테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라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계선은 모호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경은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아동 스스로 심리적 불안감과 모욕을 느끼게 할 정도까지 가야 하는데 판매에서라도 상당 부분 갈리기 때문에 그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다"며 "체벌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훈육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마약 사범 잇따라 검거

경찰 폭행하고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 버려두고 도주하기도

광주에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여한 마약 사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새벽 3시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호텔 프론트 직원을 찾아가 불만 증세를 호소하며 경찰에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소변검사를 시행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A씨는 광산구에서 거주 중이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각성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고 A씨의 모발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또 자택에 마약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광주시 서구에서 마약을 거

래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을 버려 두고 도주한 B(32)·C(32)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저녁 10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2g을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수령하던 중 인근 주택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자 깜짝 놀라 마약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체포 직후 소변검사서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C씨에게서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와 C씨는 광주시 남구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구 사友로,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판매자를 추적하는 한편 B·C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6469	1	광산구 평동로1100번길71, 206동 14층 1403호 [도산동, 송정우방아이유엘아파트] 70.8633㎡	아파트	427,000,000 427,000,000	2022타경7462 [중복]
2022타경 74455	1	북구 동문대로249번길19, 106동18층1804호 [과학동, 각화센트럴파크서브스타힐스] 84.9796㎡	아파트	457,000,000 457,000,000	
2022타경 74561	1	광산구 신창로71번길33, 207동18층1802호 [신창동, 신창2차부영아파트] 84.7886㎡	아파트	301,000,000 301,000,000	
2022타경 74660	1	북구 청단로신로217, 106동19층1901호 [신용동, 청단2지구중흥에스-클래스] 84.9976㎡	아파트	618,000,000 618,000,000	
2022타경 74912	1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30, 413동5층504호 [문남동, 문남주공4단지아파트] 37.67㎡	아파트	105,000,000 105,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2타경 7615	1	북구 동문로213번길21-1, 102동 4층 404호 [문암동, 문암아미리스] 50.4709㎡	다세대	134,000,000 134,000,00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2타경 74318	1	광산구 상암동 688-4 아몰렛코리아 점점단 근린시설 1층 104호 73.50㎡	근린시설	377,000,000 377,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대상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각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매각부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2.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이반으로 실회되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로 본다.
 3. 매각기일: 2023. 4. 4. (화) 10: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1. 입찰방에 비치된 기밀정보를 사전확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남다른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계약을 체결한 은행(일부 모수서)을 준비해야 합니다.
 2.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차액에 각자의 자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비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차액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4.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최저가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1.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이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2.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일정 지정 날의 3일전까지 중환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잔여이자, 비용등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1.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등장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등기나 기입부의 압수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부와 지등기등본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증 등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차량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원본에 제출한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1.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권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위치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명세서, 현황조사서고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무리없는 인사장(신청서)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에 나옴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완료하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6.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7. 신변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공고도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정보를 반환합니다.
-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법원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검색로그]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법원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과도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의 열람을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순매 등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타인의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1.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길호